# “4·13총선엔 ‘사회적경제’ 공약 내건 후보에게 투표를”

‘사회적 경제에 투표하라’를 주제로 4·13 총선 사회적경제 공동공약 요구안 토론회가 열린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참석자들이 자료집을 들어 보이며 밝게 웃고 있다. 이 토론회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가 함께 주최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시민사회단체·정당 등 토론회 개최**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해 머리 맞대**
**국회의원 후보들에 공약 요구키로**
**국가 수준의 어젠다 마련 위한 첫발**

**19대 국회 출발 거창했지만 용두사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차기 과제**
**‘국회내 초당적 특별위 설치’ 등 제안**
**연대회의, 각 후보에 수용여부 물어**

“사회적 경제에 투표하라.”

2014년 6·4 동시지방선거 즈음 활발하게 펼쳐졌던 사회적 경제 매니페스토 운동이 4·13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타올랐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4·13 총선 사회적 경제 공동공약 요구안 토론회’에서 시민단체, 정당,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사회적 경제 확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연대회의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50여개 단체가 모여 있다. 2012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연대회의’가 통합해 출범했다.

2년 전 선거 때 여야가 공동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젠다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만들었다면, 이날 토론회는 국가 수준의 어젠다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전국의 많은 지방정부들이 최근 수년간 조례와 공공조달 방식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 확대를 위해 노력한 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각 지방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법령, 예산 부족 등 문제로 현실적 한계가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국회와 국회의원 후보를 타깃으로 정한 건 당연한 귀결이다. 이념적으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적다는 것도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정의당·녹색당의 국회의원·당직자 등이 참여해 각 정당의 비전을 밝혔다. 2년 전 ‘전국 사회적 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에 참여했던 새누리당이 이번에 한발 뒤로 빠져 있는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협의회 상임 공동대표를 맡는 등 사회적 경제 확산에 적극적이었던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에서 강제로 물러났고, 유 의원이 주도해 발족했던 새누리당의 ‘사회적경제특위’는 해산되고 ‘나눔경제특위’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기태 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19대 국회의 사회적 경제 관련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논의를 출발했다. 그는 “19대 국회를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용두사미 국회’라 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출발은 거창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활동이 식었다는 뜻이다. 19대 국회 전반기는 미비한 법 정비 등 입법 활동이 비교적 활발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협동조합 분야는 총 22개, 사회적 기업 분야는 총 10개의 관련 법률안에 사회적 경제 조항이 반영돼 처리됐다. 이 법안들은 대부분 사회적 경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한 것이 특징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거의 매년 개정할 정도로 빠르게 대응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법률 중의 하나로 시민사회단체나 사회적 기업 등이 학수고대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벽에 부닥치고 말았다. 여야 의원 142명의 이름으로 법안을 공동발의했으나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이제 20대 국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입법활동 분야와 마찬가지로 의제화 활동에 있어서도 19대 국회 전후반기가 확연히 갈렸다. 초반기에는 ‘사회적경제연구포럼’과 ‘협동조합활성화포럼’ 같은 다양한 연구모임·포럼이 국회에 만들어졌다. 각 정당 안에도 특위가 구성돼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특위,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정의당은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동 주체들도 장밋빛 기대를 품었다. 각 정당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과 목표를 공유했으나, 2015년 중반기를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비판적 의견을 내거나 다른 법률과의 연계심의를 주장하는 등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한 당의 입장을 180도 바꿨다. 유승민 의원의 원내대표 사퇴 이후에는 ‘사회주의 경제’로 몰아붙이려는 움직임까지 불거졌다.

사회적 경제를 둘러싼 정부정책에 대한 국회의 활동은 어땠을까? 연대회의는 이날 토론회에서 “견제보다는 촉진이 많았으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등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제시되는 정책감사 정도의 역할을 국회가 하지는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회적 경제에 투표하라’를 주제로 4·13 총선 사회적경제 공동공약 요구안 토론회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다. 앉은 이 왼쪽부터 공석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 김기태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 유영우 논골신협 이사장, 이병학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양동수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대표. 이정아 기자

**4 · 13 총선 사회적경제 공동공약 요구안**

| 20대 국회의 3대 약속 | |
|---|---|
| |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br>• 국회내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설치<br>•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제도 개선 |
| **주요 7개 분야 정책과제** | |
| **보육** | • 국가는 육아의 사회적 기반을, 사회적경제는 운영의 공동체성을<br>• 육아부터 시작하는 사회의 공동체성 살리기, 공동체 영역 확대<br>• 학교 밖 방과후 활성화 |
| **교육** | • 지역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법 배우기<br>• 협동을 통해 교육복지 해결 |
| **청년** | • 청년주거, 청년과 사회의 새로운 임대계약 맺기<br>• 협동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생산성 높이기<br>• 청년들의 동네 경제권 강화 |
| **보건의료** | • 노인 주치의 사업<br>• 장애인 주치의 사업<br>• 장애인 통합재활센터 운영 |
| **돌봄** | • 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 확충<br>• 수요자 · 종사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돌봄협동조합 활성화<br>• 기초지자체별 돌봄계획 수립과 지역돌봄센터 설치 |
| **지속가능한 발전** | • 시민 중심의 재생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br>• 도 · 농 상생과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림어업분야 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br>• 농촌과 연계, 연대하는 도시민의 소비협동조합 활성화 |
| **지역 활성화** | •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농산어촌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br>• 도농의 지자체, 사회적경제조직이 협력하는 귀농귀촌 정거장 운영<br>•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공유자산 기반 구도심 개발, 주거환경 개선 |

총선이 코앞이지만 주요 정당들은 공천 지분 확보 등 계파 이해관계나 선거구도 같은 정치공학에만 관심을 쏟을 뿐 사회적 경제 정책공약은 실종상태라 할 만하다. 거의 모든 총선 사회경제정책마다 대부분 큰 줄기만 발표했을 뿐 세부 공약은 마련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한 국회 내 초당적 사회적 경제 특별위원회 설치 △사회적 경제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개선을 ‘20대 국회가 지켜야 할 3대 약속’으로 제시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경제를 국가적 의제로 격상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 틀 마련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경제특위는 상시적인 민·정 협의구조를 마련해 사회적경제기본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금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협동조합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논의를 위한 기구다. 요구안을 보면, 개선 대상인 주요 법·제도 정책에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및 기금 설치를 위한 기반 마련 등 다양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사회적 경제 관련 ‘주요 7개 분야의 정책과제’도 내놨다. 보육·교육·청년·보건의료·돌봄·지속가능 발전·지역활성화 정책 분야로 나눠 세세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특히 국회의원 후보들이 지역구의 상황을 고려해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 눈길을 끄는 건, 지속가능 발전 분야에서 ‘시민 중심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중점과제의 하나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그 세부 과제로 △안정적인 사업 보장을 위한 국공유지 및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의 장기 임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발전단가 보장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등을 제안했다.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화석에너지와 핵 발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

연대회의는 추가 논의를 거쳐 이런 약속과 과제를 최종 확정한 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보내 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공개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연대회의는 “총선 이후에도 공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 실천 방향을 제시하여 20대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의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 나선 양동수 사회적 경제 법센터 ‘더함’ 대표(변호사)는 “사회적 경제가 특수한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사회적 경제의 가치가 이제 사회의 전반적인 법과 제도에 스며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용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은 캐나다 퀘벡 사례를 인용하며 우호적인 정치세력의 확산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 자료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누리집(heri.kr)에서 볼 수 있다.)

김학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kimhj@hani.co.kr

## HERI의 눈

“예전에 대저택에 살며 다른 학문들을 호령했던 사회학이 지금은 월세 단칸방도 구하지 못해 전전하는 신세다.” 사회학자 송호근 교수가 2012년 어느 자리에서 내뱉은 탄식이다.

대규모 양적완화에 이어 마이너스 금리정책까지 등장했다. 기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이른바 ‘비전통적’ 수단들이 등장하고 있는 요즘, 사회학이 그랬듯 경제학자들도 망연자실한 채 직업적 상실감에 빠져들고 있는 건 아닐까? 다른 경제학자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한몸에 받았던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수십년 전 “경제학은 (단지) 경제학자들을 먹여살리는 수단으로는 무척 유용하다”고 비꼬았다. 대공황 이래 전례없는 위기 속에 경제학자들은 지금 갤브레이스의 말을 심각한 표정으로 곱씹고 있는지 모른다.

경제학자와 경제관료를 위시해 ‘경제전문가’로 불려온 이들은 경제·사회에 대해 발언하고 예측하는 명예로운(?) 특권을 부여받아 왔다. 번영을 구가하고 파멸을 피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마치 사실처럼 설파하고 충고할 지위를 누려왔다. 우리를 풍요의 문턱으로 데려가는 과업을 넘어, 삶을 지배하는 감독자 지위까지 오른 셈이다.

### 경제학자의 소명은 경제예측 아닌 진단

경제학자들의 자만심은 1970년대에 절정에 달했다. 당시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이 고안해낸 매끈하고 깔끔한 마법의 수리방정식 모형 덕분에 자본주의를 주기적으로 괴롭혀온 경기순환은 이제 종말을 고했다고 합창했다. 경제학자들끼리의 회합에서 폴 새뮤얼슨은 “공황과 경기순환을 주창하는 이론가들은 이제 직업을 잃게 될 것”이라고 호기를 부렸다. 경제전문가들의 무모한 자만심은 2000년대에도 계속 출몰했다. 빈발하는 경제위기와 공황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사태는 돌변했다. 그 자만심이 허세로 판명되고 큰 상처가 그 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2008년 금융위기는 그 절정이었다.

오랫동안 ‘사회과학 여왕’의 특권을 자임해온 경제전문가들의 어깨를 잔뜩 위축시키고 있는 지금의 전지구적 경제위기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물론 난공불락의 자유시장 요새를 구축해온 경제학의 실패로 단정할 수도, 경제전문가들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도 없다. 그러나 온갖 통화·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위기에서 좀체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소득불평등을 낳는 사회경제적 구조가 위기의 견고한 뿌리’라는 진단에 점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문가들이 온통 생산과 성장만을 부르짖는 동안 경제 문제에서 불평등은 의미를 잃어갔다. 성장에 힘입어 평등이 승리한 것이 아니다. ‘가려졌을 뿐 날로 악화하는’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격렬한 대응과 차분한 논쟁의 목소리는 경제전문가들에게 매우 빈곤했다.

무릇 지식인은 기존 통념에 대한 저항과 도전, 거부를 소명으로 삼는다. 제도와 정책, 그리고 시장의 힘이 각 계층과 집단에 차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고발하는 게 본업이다. 산뜻한 경제분석모형을 앞세운, 공상과학소설에 가까운 예측은 예언가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경제학자들이 (종합 일반의사가 아니라) 치과의사만큼이나 겸손하고 쓸모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계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동향분석센터장
kyewan@hani.co.kr